



카드 신상품 출시

더욱 빠빠해지나

업계 "자율성 침해" 불만

금융당국이 향후 5년 간의 수익성을 따져 흑자가 예상되는 상품만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신상품 출시가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드사 재무담당자들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 신상품 출시 기준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체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사들은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한 다면서도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회사들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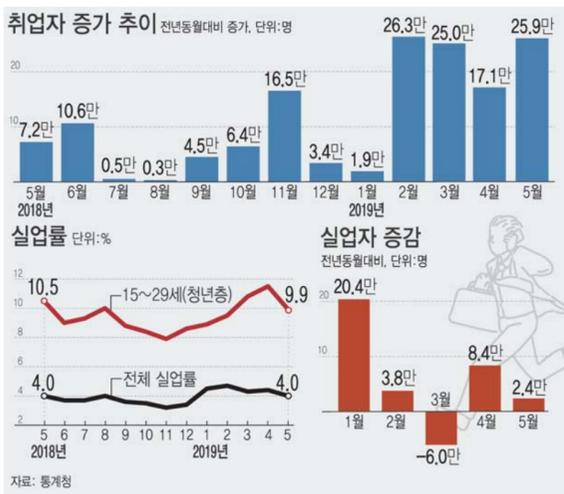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 신상품 출시 기준 강화 방침과 관련해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선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작은 카드사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회의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을 듯 싶다"면서도 "카드 신상품 출시 기준 강화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숫자만 늘린 고용 정책 핵심계층 여전히 '시름'

5월 고용률 67.1% 역대 최고...40대·제조업(반도체) 부진 여전



올해 고용 상황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당국측의 분석은 타당한 것일까. 취업자 수나 고용률 등의 수준이 희망적이긴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2월 28만 3000명, 3월 25만명 늘어난 후 4월 17만1000명 증가하며 소폭 축소됐지만 5월 들어 25만9000명으로 올라 한 달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업황 부진으로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회복세가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0개월째 감소하다 지난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뒤 4개월째 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가 폭이 매월 커지고 있다.

일본·중국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규모가 커진 덕이다. 도·소매업 역시 17개월 동안 감소 행진을 이어가다 지난달 처음 증가하며 개선 기미를 나타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집행한 일자리 정책 역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 반영되는 영종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째 1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이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40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통계 당국은 인구 증가가 반영된 고용률이 나아진 점을 두고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연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던 작년과 비교해보면 고용 상황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당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근 4개월 취업자 수 평균이 23만6000명이라는 점을 들어 "당초 목표인 15만명을 상당 폭 상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작년의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 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자 수가 114만5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이는

인구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실업자 수도 함께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5월 기준으로 보면 실업자 수와 함께 취업자 수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절대 숫자보단 고용률 등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달 넷째 주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초 정부보다 낮은 수준인 10만명을 전망했었지만, 지난달 이를 20만명으로 올려잡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를 다소 과하게 반영했던 것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력 산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각각 43개월, 1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는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수출 부진에 반도체 관련 업종의 상황이 나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형통계를 보면 지난해 조산업 피보험자수는 3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피보험자 감소 폭도 소폭 축소됐다. 그러나 반도체와 관련된 '기계장비 제조' 피보험자는 감소 전환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60세 이상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한다는 건 결국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늘어나는 걸 봐도 알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 생산성을 고려하면 현재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순 없다고 비판했다. 취업시간이 36시간을 넘는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째 감소세다."

뉴스스



분양시장 지지개에...은행 가계대출 '꿈틀'

5월 은행 가계대출 5조원 늘어나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5조원 늘어 올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지개를 켜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흐름을 이어갔다.

12일 한국은행의 '5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843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전월(4조5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2월(5조4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역대 5월과 비교했을 때는 2015~2018년 5월 평균 수준인 6조4000억원보다는 적었고 2010~2014년 평균치인 3조원보다는 규모가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2조 8000억원 늘어난 622조4000억원이었다. 전월(3조7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 거래량과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어 주택 담보대출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호로 전월(1만1000호)보다 소폭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000호로 1~3월 평균치(2만2000호)에 비해서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집단대출이 발생하는데 지난 1~3월에 비해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집단대출 규모가 축소됐다"며 "전세 거래량도 전월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0월(4조2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월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8000억원에 그쳤다.

통상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등으로 계약금 납부 수요가 늘면서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은 지난해 2만3000호로 전월(1만4000호)에 비해 급증했다.

은행 기업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등으로 5조4000억원 늘어 전월(5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대기업대출은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난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전월 13600억원에서 지난달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지역은 2조원 늘어난 323조 4000억원이었다. 증가 규모는 전월(2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취직·승진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능해졌다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

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사는 신청접수일부러 10영업일 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